

문 14.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국제사법 및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.
-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,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당사자들의 공평, 편의 및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재판권 행사라는 국제재판관할권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.
- ④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재판의 적정, 신속,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.
- 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서 추락하여 그 항공기에 탑승한 외국인 승무원이 사망한 경우, 그 승무원의 유족이 위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.

문 15. 국제사법상 권리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람이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이라 하더라도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.
- ②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.
- ③ 법원은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금지선고를 할 수 있다.
- ④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하지만, 외국에서 설립된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.
- ⑤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하고,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문 16. 국제사법상 임의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.
- ②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,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.
- ③ 본인은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, 그 선택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.
- ④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,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.
- ⑤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3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.

문 17. 한국인 甲男은 일본인 乙女와 프랑스에서 혼인한 후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독일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미국인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에 따라 그 주택의

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하려고 한다.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위 주택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은 어느 나라 법에 의하는가?

- ① 대한민국법 ② 일본법 ③ 독일법
- ④ 프랑스법 ⑤ 미국법

문 18. 네덜란드에서 최종 목적지를 그리스로 하여 발송한 화물이 독일과 스위스를 거치는 경로로 이동 중인데, 현재 어느 국가에 있는지 불명(不明)인 상태에서, 프랑스 사람에게 이탈리아에서 매도되었다면 우리나라 국제사법상 이로 인한 물권변동의 준거법은? (단, 위 화물에 대한 유가증권은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)

- ① 네덜란드법 ② 그리스법 ③ 이탈리아법
- ④ 프랑스법 ⑤ 독일법 또는 스위스법

문 19.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.
- ② 소비자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③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.
- ④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.
- ⑤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
문 20. 국제사법상 채권의 양도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.
- ② 채권의 양도가능성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.
- ③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.
- ④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,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.
- ⑤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.

문 21. 국제사법상 유언의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.
- ② 유언의 변경은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.
- ③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있다.
- ④ 유언 당시 행위지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 있다.
- ⑤ 유언의 철회는 그 당시 행위지법에 의한다.

국제법

문 22.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- ② 부부재산제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, 혼인 당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, 혼인 당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의 순서로 준거법이 결정된다.
- ③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.
- ④ 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이혼한 당사자간의 부양의무는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의한다.
- ⑤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은 대한민국에서 한정치산을 선고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.

문 23. 국제사법상 준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?

- ㄱ.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(子)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부(父) 또는 모(母)의 본국법에 의한다.
- ㄴ.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(子)의 출생 당시 부부 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.
- ㄷ. 인지는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다.
- ㄹ.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부(父) 또는 모(母)의 본국법 또는 자(子)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.

- ① ㄱ(×), ㄴ(○), ㄷ(○), ㄹ(○)
- ② ㄱ(○), ㄴ(×), ㄷ(×), ㄹ(○)
- ③ ㄱ(○), ㄴ(×), ㄷ(○), ㄹ(×)
- ④ ㄱ(×), ㄴ(○), ㄷ(×), ㄹ(○)
- ⑤ ㄱ(×), ㄴ(○), ㄷ(×), ㄹ(×)

문 24. 국제사법상 수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표의 제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지급지법에 의한다.
- ② 수표의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의한다.
- ③ 수표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지급지법에 의한다.
- ④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의할 수 있다.
- 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의하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.

문 25. 국제사법상 해양사고구조에 대한 아래의 설명 가운데 (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때에는 (A)에 의하고, 그 구조행위가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(B)에 의한다.

- | A | B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구조된 선박의 선적국법 |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 |
| ② 행위지법 | 구조된 선박의 선적국법 |
| ③ 행위지법 |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 |
| ④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 | 법정지법 |
| ⑤ 행위지법 | 법정지법 |

문 1. 국제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국제법상 성문화된 법원이 불문법원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, 조약이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.
- ㄴ.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충돌 시 신법우선원칙 등 일반적인 규범충돌 해결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.
- ㄷ. 일반관습법 규범이 지역관습법 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.
- ㄹ. 조약과 국제관습법 중에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강행규범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.
- ㅁ. 특정 국제관습법의 성립에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온 국가에게는 해당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ㄷ, ㅁ
- ③ ㄴ, ㄷ, ㄹ
- ④ ㄴ, ㄹ, ㅁ
- ⑤ ㄷ, ㄹ, ㅁ

문 2. 국가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다른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적 대립이 존재한다.
- ② 국민의 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.
- ③ 영토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, 영토는 서로 접촉해 있어야 한다.
- ④ 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정부가 있어야 한다.
- ⑤ 국가 간의 조약에 따른 제약은 그 국가를 타국가의 법적 권한 하에 두지 않는 한, 독립된 정부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문 3.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유형별로 설명한 것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일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.
- ② 연방국가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취급된다.
- ③ 연방국가에서 외교, 국방 등의 주요한 대외적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처리한다.
- ④ 연방국가는 그 구성국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⑤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대외적으로 각각 하나의 독립국가로 취급된다.

문 4. 2001년 국제법위원회(ILC)에서 채택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

국가책임규정초안상의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국가기관인 행위자가 그 권한을 넘어서 하는 행위는 외견상 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야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.
- ② 사인의 행위일지라도 국가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통제되는 행위 또는 공적기관의 부재 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.
- ③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.
- ④ ILC의 작업초기에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많은 비판이 있어, 2001년 채택된 초안에서는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만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정하였다.
- ⑤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.

문 5. 외국인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위법한 침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.
- ② 사인의 국제위법행위도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작위가 인정되는 경우,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.
- ③ 폭동이나 반란으로 외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, 일반적으로 체류국 정부의 반란진압노력 태만 등의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.
- ④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,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가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⑤ 사법부의 재판거절(denial of justice)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예로 외국인의 소송을 거부하는 것, 명백히 불공평한 재판 등을 들 수 있다.

문 6. UN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UN헌장상의 자위권 규정은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예외 중 하나이다.
- ② UN헌장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.
- ③ 개별적 자위권 행사뿐만 아니라,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다.
- ④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될 수 있다.
- ⑤ UN헌장은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.

문 7. UN 회원국의 지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신규 회원국의 가입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
- ② 안전보장이사회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회원국으로서 갖는 권리 및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.
- ③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토의 중인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더라도 그 토의에 참가할 수 없다.
- ④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마찰로 이어지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여하한 사태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.
- ⑤ UN헌장의 원칙을 집요하게(persistently) 위반하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.

문 8. 다음은 UN 기관들의 표결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총회는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,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, 회원국의 권리 및 특권행사의 정지 등을 결정한다.
- ㄴ. 분담금의 납부를 연체한 회원국일지라도 총회에서 투표권이 인정될 수 있다.
- ㄷ.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ㄹ.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결정하는 경우 그 분쟁의 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.
- ㅁ.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ㄴ, ㅁ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ㄷ, ㄹ
- ⑤ ㄴ, ㄹ, ㅁ

문 9. UN 총회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를 장려한다.
- ②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.
- ③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UN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,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요청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하여 여하한 권고도 할 수 없다.
- ④ 총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,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발생하는 경우,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는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.
- ⑤ 총회는 UN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여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할 수 있다.

문 10.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.
- ② 국가는 외국인의 체류조건을 정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경우에 강제로 출국시킬 수 있다.
- ④ 외국인을 추방시키는 경우 사전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야 한다.
- 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,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.

문 11. 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외교적 보호권은 전통적으로 외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국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.
- ②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정부가 외교적 보호권과 개인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.
- ③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은 당사국 간 사전 또는 사후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.
- ④ 2006년 국제법위원회(ILC)의 외교적 보호권 초안에 의하면, 개인은 피해를 입은 당시부터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청구 시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.
- ⑤ 2006년 국제법위원회(ILC)의 외교적 보호권 초안에 의하면, 이중국적을 가진 개인이 제3국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, 이중국적국 중의 어느 한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면 다른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문 12.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배타적 경제수역
- ㄴ. 통과통항제도
- ㄷ. 군도수역
- ㄹ. 역사적 만
- ㅁ. 접속수역
- ㅂ. 직선기선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ㄹ, ㅁ
- ③ ㄴ, ㅁ, ㅂ
- ④ ㄷ, ㄹ, ㅂ
- ⑤ ㄹ, ㅁ, ㅂ

문 13.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.
- ② 국가의 주권은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까지 미치며, 군도국가의 경우 군도수역에도 그 주권이 미친다.

- ③ 영해 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연안국의 내수를 구성한다.
- ④ 군함 및 군용항공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.
- ⑤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공해까지도 추적할 권리를 갖지만, 이러한 권리는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로 진입함과 동시에 소멸한다.

문 14.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 협약은 문서로 체결된 국가 간의 조약에만 적용된다.
- ②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조약의 발효 전에도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.
- ③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 여부가 유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.
- ④ 외무부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
- ⑤ 조약은 비준에 의해서만 기속적 동의를 부여된다.

문 15.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만으로 묶은 것은?

- ㄱ.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
- ㄴ. 착오
- ㄷ. 조약의 실질적 위반
- ㄹ. 강행규범의 위반
- ㅁ. 후발적 이행불능
- ㅂ. 근본적 사정변경

- ① ㄱ, ㄴ, ㄷ
- ② ㄱ, ㄷ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ㄷ, ㅁ, ㅂ
- ⑤ ㄹ, ㅁ, ㅂ

문 16. A국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B국, C국, D국을 상대로 하여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소송을 제기하였다. 이 사안에서 전원재판부(full court)를 구성하는 경우, 재판관의 수는 최대한 몇 명까지 가능한가?

- ① 11
- ② 15
- ③ 16
- ④ 17
- ⑤ 19

문 17.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재판소규정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.
- ②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분쟁당사국 간의 합의는 동시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③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.
- ④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분쟁당사국 간,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.
- ⑤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동 재판소가 결정한다.

문 18. 국가 간의 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의한 사법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재재판은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반면, 사법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소가 사전에 설립되어 있다.
- ②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,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.
- ③ 중재재판에서 분쟁당사국은 중재절차, 적용법규 등을 합의할 수 있다.
- ④ 사법재판의 경우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.
- ⑤ 중재재판은 항소가 불가능하나, 사법재판은 항소가 가능하다.

문 19. 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재판절차와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 해결기구의 패널절차 간의 공통성이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?

- | |
|--|
| ㄱ. 제소 또는 패널설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협의절차 |
| ㄴ.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항소 가능성 |
| ㄷ. 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사건 종료 가능성 |
| ㄹ. 판결 평의 또는 판정 심의(deliberations)의 비공개성 |
| ㅁ. 서면 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 |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ㄱ, ㄴ, ㄷ | ② ㄱ, ㄴ, ㅁ |
| ③ ㄱ, ㄷ, ㅁ | ④ ㄴ, ㄷ, ㄹ |
| ⑤ ㄷ, ㄹ, ㅁ | |

문 20. WTO설립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WTO설립협정의 규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, 상충의 범위 내에서 WTO설립협정이 우선한다.
- ② GATT 규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, 상충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우선한다.
- ③ WTO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은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④ 각국의 시장개방 협상으로 도출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약속은 WTO설립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- ⑤ 1947년 GATT는 1994년 GATT의 구성요소이며, 1994년 GATT와 법적으로 구별된다.

문 21. 세계무역기구(WTO)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WTO는 1947년 GATT에서 지켜졌던 총의(consensus)에 의한 의사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.
- ② WTO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다.
- ③ 국가가 WTO에 가입할 때 다른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WTO설립협정과 동 협정 부속서 1, 2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비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.
- ④ WTO 회원국이 WTO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- ⑤ WTO설립협정은 회원국의 지방정부나 비정부기관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.

문 22. WTO 분쟁해결양해(DSU)상의 당사자 적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WTO 회원국(Members)만이 분쟁해결기구(DSB)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.
- ② 원칙적으로 비회원국과 사인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지만,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.
- ③ 유럽연합(EU)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 적격성을 갖는다.
- ④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도 제소할 수 있다.
- ⑤ 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하는 제3국은 당해 분쟁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.

문 23. WTO 분쟁해결제도상 상소기구(Appellate Body)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상소할 수 있는 사항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.
- ② 7인의 상소기구위원 중 5인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출한다.
- ③ 상소절차는 상소통보일로부터 최종보고서 회람까지 90일, 최대한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⑤ 상소기구위원의 국적국이 분쟁당사자인 경우, 그 상소기구 위원은 당해 사건을 맡을 수 없다.

문 24. WTO 분쟁해결양해상의 무역보복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.
- ②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보복조치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.
- ③ 분쟁해결기구는 대상협정이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없다.
- ④ 보복조치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역총의제(reverse consensus)에 의한다.
- ⑤ 보복조치의 수준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나, 타방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중재절차가 개시된다.

문 25. UN에 의한 분쟁해결 및 WTO 분쟁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제사법재판소(ICJ) 사건의 당사국이 ICJ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, 타방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.
- ② UN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.
- ③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ICJ에 제소할 수 없다.
- ④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시절보다 사법적(司法的) 방식에 의한 해결기능이 강화되었다.
- ⑤ 비정부기구(NGO), 지방정부 또는 개인은 직접 WTO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없다.

노동법

문 1.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노동조합 기타 단결체를 조직·가입 및 운영할 권리를 말한다.
- ②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,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.
- ③ 근로자의 조합활동권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·노무지휘권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.
-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
- ⑤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을 수 없다.

문 2. 노동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다.
- ② 근로자 개인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다.
- ③ 실업자에 대한 직업소개나 직업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은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다.
- ④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는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다.
- 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규율대상이다.

문 3. 노동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.
- ②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체결 당사자가 아닌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다.
- ③ 어느 사업장에 관행이 반복되어 기업의 구성원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면 그 관행이 「근로기준법」에 위반되더라도 유효하다.
- ④ 국제노동기구(ILO)가 우리나라에 행한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
- 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는 유효하다.

문 4.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근로자가 해외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.
- ② 「근로기준법」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.

- ③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.
- ④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.
- ⑤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.

문 5. 「근로기준법」상 임금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② 사용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우선할 수 없다.
-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.
- ④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당해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.
- ⑤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.

문 6. 「근로기준법」상 임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ㄴ.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과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계하지 못한다.
- ㄷ.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무효이다.
- ㄹ.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,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
- ① ㄱ, ㄴ, ㄷ, ㄹ
- ② ㄱ, ㄴ, ㄷ
- ③ ㄱ, ㄴ, ㄹ
- ④ ㄴ, ㄷ, ㄹ
- ⑤ ㄴ, ㄷ

문 7.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근로기준법」은 1주 및 1일의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, 휴게시간의 최대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.
- ②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-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감시(監視) 또는 단속적(斷續的)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「근로기준법」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문 8.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A회사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甲노동조합이 있다. A회사는 2011. 4. 1. 甲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. 이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할 때,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취업규칙의 변경된 부분은 2010. 5. 3.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다.
- ② 취업규칙의 변경된 부분은 2011. 4. 20.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.
- ③ 2011. 1. 1. 입사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면, 취업규칙의 변경된 부분은 그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.
- ④ A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
- ⑤ 甲노동조합이 변경된 취업규칙 부분을 2011. 6. 1. 단체협약으로 소급하여 동의한 경우 동의 당시 재직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 시부터 효력이 있다.

문 9. 「근로기준법」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,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.
- ②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「근로기준법」 제61조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는 소멸하고 보상 청구만 가능하다.
- ③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④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.
- 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.

문 10. 「근로기준법」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근로자의 정년과 같은 당연퇴직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도 해고 제한 규정(「근로기준법」 제23조)이 적용된다.
- ②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,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근로자가 주장·입증해야 한다.
- ③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「근로기준법」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.
-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.
- 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문 11. 「최저임금법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?

- ㄱ.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ㄴ. 사용자가 「최저임금법」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.
- ㄷ.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, 사용자위원,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.
- ㄹ.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- ① ㄱ(○), ㄴ(○), ㄷ(○), ㄹ(○)
- ② ㄱ(×), ㄴ(×), ㄷ(○), ㄹ(×)
- ③ ㄱ(○), ㄴ(×), ㄷ(×), ㄹ(×)
- ④ ㄱ(×), ㄴ(×), ㄷ(○), ㄹ(○)
- ⑤ ㄱ(○), ㄴ(○), ㄷ(×), ㄹ(×)

문 12. 「근로기준법」 또는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산전·산후의 보호휴가를 사용한 기간
-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
- ③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
- ④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이후 30일 동안의 기간
- 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기간

문 13. 노동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.
- ②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.
- ④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.
- ⑤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고,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문 14.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목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.
- ㄴ. 근로조건의 유지·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한다.
- ㄷ.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한다.
- ㄹ.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- ⑤ ㄱ, ㄴ, ㄷ, ㄹ

문 13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.
- ③ 사업자인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.
- ④ 대법원은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·의원 등에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.
-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.

문 14. 「소비자기본법」상 결함 있는 물품 등의 수거·파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결함 있는 물품 등의 수거·파기 등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거·파기 등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.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함 있는 물품 등의 수거·파기 등을 명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함 있는 물품 등의 수거·파기 등을 명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 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.

문 15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그 위법 여부에 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.
- ② 「소비자기본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④ 표준이 될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도 소비자단체가 아니면 그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.
- 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.

문 16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)

- ① 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된다.
- ② 약관의 대다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
- ③ ‘계약서’, ‘규정’ 등의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면 이 법이 적용된다.
- ④ 약관의 용어풀이 규정이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약관에 대하여 관청의 인가가 있었다라도 그 용어풀이 규정은 무효가 된다.
- ⑤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.

문 17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)

-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③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④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내용을 정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⑤ 사업자가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문 18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할부계약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계약내용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②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할부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
- ④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할부거래업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.
- 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용역이 제공된 때에는 할부거래업자는 원칙적으로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문 19.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상 일부 무효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이 특칙은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.
- ② 이 특칙은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와 동일하다.
- ③ 이 법에 따라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.
- ④ 이 법은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한 추인규정을 두고 있다.
- ⑤ 이 특칙은 고객보호의 목적과는 무관하다.

문 20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상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간접할부계약이라 함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,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.
- ②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 모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.
- ③ 할부거래업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할부계약 체결 시에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서 대신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다.
- ④ 할부거래업자는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에게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때에는 7일 이후에 해당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에 대한 할부금의 청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문 21.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 내용과 해당 법률을 옳게 연결한 것은?

- ㄱ. 전기 냉방기 등과 같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.
- ㄴ.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한다.
- ㄷ.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, 다만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- a.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
- b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
- c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

- ① ㄱ-a, ㄴ-b, ㄷ-c ② ㄱ-b, ㄴ-a, ㄷ-c
- ③ ㄱ-a, ㄴ-c, ㄷ-b ④ ㄱ-c, ㄴ-a, ㄷ-b
- ⑤ ㄱ-c, ㄴ-b, ㄷ-a

문 22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다단계판매자에게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은?

- ①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
- ② 재화등의 가격·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
- ③ 청약철회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·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
- ④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
- ⑤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

문 23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ㄴ. 지방공무원 ㄷ. 한정치산자 ㄹ. 법인
- ㅁ.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미성년자

- ① ㄱ, ㄴ, ㄷ ② ㄱ, ㄷ, ㄹ
- ③ ㄱ, ㄷ, ㅁ ④ ㄴ, ㄷ, ㅁ
- ⑤ ㄴ, ㄷ, ㅁ

문 24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할 때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기관은?

- ① 한국소비자원 ② 공정거래위원회
- ③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④ 한국공정거래조정원
- ⑤ 소비자정책위원회

문 25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통신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- ③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.
- ④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선불식 통신판매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